

이재명, 통합행보 강화

황희·이나영과 '尹 정권 심판' 다짐

서울 양천갑, 황희 의원 단수공천 황 "이 대표와 민주정부 4기 만들 것" 이 위원 "황 후보 도와 총선 압승" 이재명, 비명계 학살 의혹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양천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황희 민주당 의원(재선)을 지지 방문하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천갑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과, 민주당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나영 상임운영위원이 2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특히 이 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친문재인계'인 황희 의원과 '친이재명계'인 이 위원의 한판승부가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나영 위원이 당에서 허용하지 않은 예비홍보물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하면서 황희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이 위원은 이를 승복하고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황희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황 의원과 이 대표와 손을 잡고 황 의원을 지지했다.

임 전 실장이 자신의 공천배제를 수용하고 이 대표를 적극 비판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의 공천 잡음이 수그러들자, 이 대표는 황 의원에 힘을 보태며 당에 통합 색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황희 의원은 선거사무소를 찾은 이재명 대표를 띄우며 방문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구갑 예비후보였던 이나영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술인회관에 마련된 황희 양천구갑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황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천구갑 예비후보였던 이나영 후보, 황희 더불어민주당 양천구갑 후보. /뉴시스

그는 "정치로 가는 길이 고단하고 가시밭길이다. 민주주의가 퇴행하면 할수록 그 길이 험난하다는 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도자만이 걸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퇴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이 대표와 함께 민주정부 4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영 위원은 "저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승복하며 4월 10일 총선 압승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뺄 때까지 황 후보를 도울 것"이라며 "양천갑이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해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에 한번 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이 눈물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그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의 구성원"이라며 "잠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승리로 나

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소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힘을 합쳐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명계 학살'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을 지휘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힘들고 잃는 게 많다"며 "일부에서 자기 세력을 쌓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그나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절 원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통신비 세액공제 등 부담경감 추진

군인 통신비 할인을 확대 등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가구당 통신비가 월 평균 13만원으로 집계돼 가계에 부담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부담 경감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개호 정책위의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로, 민주당은 교통비처럼 현대인의 필수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겠다고 했다.

둘째, 현행 각 이동통신사에서 군인의 통신비를 20% 할인해주는 것을 병사에 한해 50%로 할인율을 확대 조정하겠다고 했다.

셋째, 매일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선불하기 또는,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넷째, 공공 슈퍼 와이파이를 구축해 TV 주파수 유휴대역인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활용을 통해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기관의 고객센터 상담전화 전면 무료화 시키고, 가계통신비 중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장치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하거나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의 통신비 경감 정책에 대해 실질적이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통신비 경감 공약 자체가 없었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과 추진 로드맵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는 단통법 폐지 선언에 따른 대체입법은 제출하지 않은 채, 통신비 인하를 명분으로 강행한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며 시행령 개정과 관련 고시 제·개정 추진은 '고가 단말기 - 고가 요금제 - 고액 지원금'을 조건으로 '번호이동'만 유도하게 돼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조국혁신당 "12척 배로 학익진 망치선 되겠다"

지지율 조사서 15% 집계... 3위 기록 4050세대 움직임에 총선연합 가능성 이미 비례대표 위성정당 있어 비판도

진보진영에서 중도층과 부동층을 포용해 지역구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선명한 캠페인을 거침없이 전개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 출범 전까지 물음표로 남아있던 조국혁신당은 점차 느낌표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보다 '좌클릭'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꾸준히 일정한 응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집계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 조사(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15%로 집계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30%, 민주당의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21%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였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대표와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4050세대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조국혁신당에 표를 보태겠다는 움직임이 나오자, 양당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말을 꺼내며 총선연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전날(5일) 이재명 대표와의 국회 회동에서 '학익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이 망치선의 역할을 맡아 선두에서 서면, 뒤에 민주당이 뒤에 포진해 총선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이자 대변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6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 의석수가 12척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저희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 10석을 목표로 했다. 제가 오늘 목표를 조금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다"며 "12척의 배를 주시면 말씀드렸듯이 학익진의 망치선이 돼서 쪽쪽 한번 뚫고 나가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은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확실하게 선택하게 하고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찍게 판을 깔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있음에도, 조국혁신당과 공식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이미 녹색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적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진정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인해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켜, 윤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일등공신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인가"라며 "저는 윤석열의 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 창밖 풍경을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尹 "CSIS, 한미동맹 구심점 돼주길 바라"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햄리 회장 "美 조야 지지 확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朝野·정부와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지속적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정책 싱크탱크인 햄리 회장을 포함한 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CSIS가 주요 싱크탱크 중 최초로 '한국 석좌직'을 설치하고 한미 연례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점을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 조야의 변함없는 지지가 중요

하다"며 CSIS가 구심점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햄리 회장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미동맹이 도약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동맹의 성공과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정표가 됐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가 확고하다"며 CSIS 차원에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찬을 겸한 이날 접견에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매튜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부보좌관, 앨리슨 후커 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함께 했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